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21호

[이재명 정부에 제언하는 스포츠 정책 ②] 학생 운동선수의 '배울 권리'

'내가 공부로 대학 갈 수 있겠어?' 그 말, 인권침해입니다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재명 정부에 제언하는 스포츠 정책 ③] '엘리트 스포츠' 살리기

스키 국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둘 다 했냐면요

서정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통한 장기적 정책 재편 제안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예산 중단 논란...시민 체육권 위협

김영호 브릿지경제 기자

서울 소재 H고등학교 사격부

“성추행 징계 논란”...사격 유망주, 후배 괴롭힘→8개월 자격정지 처분

한유진 톱스타뉴스 기자

선수들 “경기 집중 못해”...지도자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예고

문경시 A코치 막말 논란, 스포츠운영위 16일 긴급 소집

신재화 대경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네가 공부로 대학 갈 수 있겠어?' 그 말, 인권침해입니다

"모든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문장이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다. 이를 교육권이라고 하며 아동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헌법은 국민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이를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구체화했다.

따라서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인 모든 아동들의 교육권은 법에 따라 인권으로 보장돼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본권의 침해이자, 인권 침해, 그리고 아동학대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학생선수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이미 이들의 학습권이 모든 아동의 학습권과 다르지 않음을 천명했다. 국제적으로도 IOC(국제올림픽위원회), UNICEF(유엔가동기금) 등이 아동의 과도한 스포츠 몰입을 지양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할 것을 관련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엘리트 체육 집단이 건재하다. 이들은 '현장'과 '특수성'을 이유로 '학업보다는 운동'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이어가려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고, 그럴 이유도 없어진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다.

온갖 '예외'로 얼룩진 학생선수의 삶

과거부터 학생선수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선생님들도 그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이해인지, 외면인지, 깨우지 않고곤 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 '예외'적이었던 그들의 삶은 분명 일반 학생들과 달랐으며, 이 '다름'은 학생선수가 온갖 '예외'에 익숙한 삶을 살도록 했다.

학교별·종목별·연령별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경우 하루 24시간 중 새벽·오후·저녁으로 이어지는 훈련시간은 매일 7시간에 이른다. 또 모든 학생과 같이 7시간 정도의 정규 학교 수업시간이 있는데, 이마저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식사·개인정비·과제 등 생활에 필수적인 4~5시간을 빼면 대략 6시간 정도가 남는데, 바로 이때가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취침시간이다. 하루 이를 이렇게 지내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 같은 생활의 반복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수업시간이 곧 취침시간이 되도록 했다.

이런 학생선수의 삶에서 학업은 부담이 될 뿐이다. 어차피 운동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당에 학업도, 잠을 깨우는 선생님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도 방해물로 인식될 뿐이다.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게 매일 반복되는 삶, 그리고 그들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가 그들의 '예외'를 만들어 냈다.

2019년 인권위 학생선수 전수조사에서 운동-학업 병행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다수의 학생이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중학생 23.0%, 고등학생 34.9%는 '필요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신체적으로 피곤'(39.8%/34.9%), '운동과 훈련에 방해'(27.3%/31.7%)를 들었다. 학업이 그들의 삶에 도움 될 것은 알지만, 당면과제인 입시와 취업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학업이 등한시되는 분위기는 학생선수가 소속된 운동부에서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학업을 병행하려는 학생선수에게 "그 시간에 운동을 더해라", "팀을 생각하지 않는다", "공부로 대학갈 수 있냐"는 등의 타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지도자의 요구와 학부모의 욕망이 맞닿으면서 운동부에게는 학업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이 내면화된다.

1970년대부터 학교체육의 역량은 '국위선양'이 목적인 '꿈나무 발굴'에 집중됐다.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기량이 우수한 학생·팀은 학교를, 지역을,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시키는 피라미드 모형이 필요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델 구축엔 시간이 걸리다 보니, '현장'에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른바 '운동할 학생'과 '아닌 학생'을 선별하고, 운동할 학생을 목적에 맞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표주박형 모델'이 정착된 것이다.

'선별'된 학생선수의 앞에는 입문 단계에서부터 파란약과 빨간약이 내밀어졌다. 운동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접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결심을 한 다음에야 '운동부'의 일원이 될 수 있던 것이다. 운동부 일원이 된 이상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했다. 모든 시간과 역량을 운동에만 집중해야 성과가 난다는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은 판타지가 그들이 말하는 '현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예외'가 학생선수의 권리를 빼앗는다

2023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조용만 당시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개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다음 장 계속

이같은 흐름 속에서 학교체육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식있는 현장 교사들이 늘어갔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장 교사와 체육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학교 운동부, 나아가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학습권 문제 등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는 오랜 기간 '고인' 운동부 문화에서 기인하는 만큼, '현장 개혁'이 주요과제로 부상했다. 그동안 운동부의 학습권 박탈이 국위선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던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학교체육 현장의 균열도 함께 생겨났다.

2006년 무렵 인권위의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기점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2007년 국회에선 안민석 의원 외 11명이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냈다. 정부는 2008년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학원체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며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검토했다.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현장의 관성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가면서는 체육인들이 지상 최대의 목표로 여기는 '국위선양'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에는 동의하나 현장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예외를 만들어 내며 학습권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교육부의 '결석인정허용일수'라는 예외 조치로 초등학교부터 '공식적인' 수업 결손을 허락했다. 최저학력제는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최근 당선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결석인정허용일수 확대, 최저학력제 폐지에 더해 합숙소 부활까지 선언하며 학교체육을 1970년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 학습권은 학업을 말할 수도, 이어갈 수도, 권할 수도 없도록 만드는 그들만의 예외 속에 질식되고 있다.

일각에선 '운동도 공부다', '공부가 싫어 운동을 선택한 건 자기결정권이자 행복추구권'이라고 주장한다. '공부는 훗날 필요할 때 하면 된다'며 기초학력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주장, '학업-운동의 병행은 스포츠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학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주장, '스포츠는 그 자체로 전문영역'이라며 비인권·비교육적 관행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가 결국 인권의 지향점인 '보편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학생선수가 학업 따라갈 수 없는 진짜 이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경쟁일변도인 소년체전의 교육적 변신 ▲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의 재개념화 ▲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인프라와 프로그램 ▲ 지덕체를 고루 평가하는 입시제도 ▲ 특출난 자원들 또는 소외·배제될 위기에 있는 학생선수 대상 (교육적) 예외 등이 필요하다.

현재 축구와 야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은 전국대회에 집중하는 구조여서 학생선수가 장기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등 체육에 관여하는 소관 부처와 기관이 많아 대회가 무분별하게 개최된다는 문제도 있다. 대회 개최 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니고, 대관, 대회 간의 일정, 협회의 사정 등이 앞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결석이 밥 먹듯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결석이 비일비재한 환경 속에서는 학생선수가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져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도 만들어 낸다. 실제로 2019년 인권위 조사에선 미래를 위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선수들의 진짜 고충이 바로 이 지점에 있음을 확인했다.

최저학력제의 무력화 움직임은 '학생선수도 학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와 지도자들의 노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학습권을 지키고자 하는 지도자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욕망과 부딪혀 '불필요한' 일에 신경쓰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고충이 발생한다. 또 어떻게든 학생선수를 오래 '붙잡고' 있는 지도자가 '열심히 한다'고 평가되는 현장은 훈련의 효율성이라는 과학적·합리적 인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생선수의 비인권적 시간표도 그런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고, 합숙소 부활이라는 시간을 거스르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세울 땐 이미 인권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업-운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저변확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고등학교부터는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되 학업이 필요한 학생의 보충학습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장기간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는 교사가 동행해 학업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보충학습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의무교육 기간 수업을 빠지지 않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는다면,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와 같은 반헌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동일전공진학조치 등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 또한 함께 폐지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 속에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기회도 마련될 것이다.

합숙훈련의 경우는 합숙소가 인권침해적인 환경의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상시합숙 훈련을 금지하는 학교체육진흥법상의 규제를 이어가되, 교육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위한 단기 합숙엔 제한된 기간을 뒤 관리한다면 교육적 성과와 경기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스포츠 개혁은 수많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전쟁터와 같다. 특히 국가가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 향배가 갈리게 된다. 인권위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편들을 내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스포츠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이 보호되고,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며,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환경 구축은 국가가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환경 구축, 새로운 정부의 선명한 시선을 기대한다.

스키 국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둘 다 했냐면요

서정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변호사

2025.06.14

나는 학생운동선수 출신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모굴스키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중간고사를 응시하기 위해 국가대표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경험은 내게 깊은 의문을 남겼다. '운동과 공부는 함께할 수 없는 걸까?',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운동선수로서의 진로뿐 아니라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이후 다시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출전했다. 2010년 밴쿠버부터 2018년 평창까지 세 번 연속 태극마크를 달고 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운동선수는 곧 '학생'이었고, 공부하는 학생은 누구나 운동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었다. 선수 은퇴 후에는 국내 로스쿨에 진학해 스포츠 인권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국가대표를 포기한 시절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선수냐, 학생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분위기다. 그 결과, 운동을 좋아하던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을 접게 되고, 엘리트 스포츠의 길을 걷는 선수들은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왜 엘리트 스포츠가 쇠퇴하는가

오늘날 한국 스포츠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서는 유소년 선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학생조차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시간 또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체육계, 학부모, 정책 입안자 모두 "엘리트 스포츠와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엔 합의가 부족하다. 한쪽에서는 엘리트 선수 감소의 원인을 학업 부담이나 진로 불안정 탓으로 돌리며 단기적인 유인책이나 시설 확충만을 논의한다. 또 운동도 공부라며 헌법상 인정될 수 없는 '운동권'(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권리)을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빠져있다. 결국 엘리트 스포츠와 학교 체육이 분리된 구조 속에서 양쪽 모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포함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방식이 '선택의 강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은 '운동을 하려면 공부를 포기해야 한다', 혹은 '공부하려면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운동에 재능과 흥미가 있어도 대부분의 학생은 더 안정적인 진로인 공부를 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소수를 조기 선발해 집중 훈련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언제든지 엘리트 스포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선수와 팀이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갖춰질 때, 학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는' 길 위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스포츠가 일상이 되는 사회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시설의 확충, 생활체육의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스포츠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의 양이 아니다.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할 사람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다. 결국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요가 필요하며, 수요는 '스포츠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에서 나온다.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참여 경험이 있는 체육활동'으로 응답자의 41.2%가 '걷기'라고 답했다. 뒤이어 등산 15%, 헬스 11.5%, 달리기 6.8% 순이었다. 이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접근성과 경험이 제한돼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야구, 농구, 축구 등 종목별 클럽과 리그가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누구나 일정 수준까지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다양한 종목이 활성화돼야 시설 확충 요구도 설득력을 얻고, 민간 자본이든 국가 재원이든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다음 장 계속

시설과 수요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둘 다 병행해 키워야 한다. 스포츠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종목의 참여 인구를 늘리며, 동시에 시설과 제도를 확충하는 입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은 노동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인간의 여가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주 4일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인간의 신체 활동'이다. 스포츠는 인간의 몸을 직접 움직여야 가능한 활동이며, 협력·경쟁·감정·몰입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간 활동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증가한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스포츠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답이 된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뛰고, 웃고, 경쟁하며 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은 AI가 제공할 수 없는 인간만의 자산이다.

엘리트 스포츠는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돼선 안 된다. 모든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구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엘리트 스포츠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다. 우리는 더 이상 '운동이냐, 공부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아이들에게 둘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운동은 그 자체로 인간 삶의 일부이며, 학교는 그 운동을 멈추지 않도록 돕는 곳이어야 한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에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로. 그렇게 될 때 엘리트 스포츠는 다시 살아나고, 학생들은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예산 중단 논란...시민 체육권 위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이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편성했던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2023년부터 전액 중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정책이며, 시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의 사례를 언급하며,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 체육센터 대신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이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의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 방향을 조정했다고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운영비 지원 성격의 인센티브와 시설 보수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 체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한 “늘봄학교처럼 시설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로 학교시설 개방도 장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이 민감한 현안을 제기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의 책임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추행 징계 논란”…사격 유망주, 후배 괴롭힘→8개월 자격정지 처분

침묵조차 무거웠다. 의욕적으로 입학한 신입 사격부원에게 쏟아진 괴롭힘과 성추행, 그리고 결국 운동장을 떠나야 했던 피해자의 퇴장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한때 ‘미래의 별’로 불린 선배 선수는 자신이 만든 그림자 앞에서 징계받았다.

서울 소재 H고등학교 사격부에서 동성 후배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혐의로 사격 유망주가 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4년 서울 H고 사격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B 군은 2023년 봄 새로 입학한 1학년으로, 사격부 2학년 선배 A 군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체 접촉, 강요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5월 대회 기간 중, 훈련장과 합숙소에서 신체에 물을 뿌리는 등 B 군에 대해 상의를 탈의한 채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 모습이 휴대전화로 촬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영상 속에선 B 군이 ‘언제까지 찍을 거냐’며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B 군은 사격을 중단하고 학교도 옮겼다.

2023년 7월, 서울시사격연맹은 신고를 접수한 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사건을 조사했다.

A 군은 “동생이 어리바리해서 챙기느라 장난을 쳤다”며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군은 “평소 욕설과 일방적 괴롭힘이 반복됐고, 선배가 신체 접촉 후 ‘이런 행동을 하면 경기력이 오른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고 맞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A 군에게 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사격연맹은 결정문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며, 강요·신체 접촉 등은 선후배 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더 강력한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A 군이 아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점이 참작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A 군과 가족은 서울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A 군 측은 제삼자의 신고였다는 점과 B 군 전학 사유, 후배 사격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들어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군은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징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사격연맹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 인권 보호 대책 마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향후 징계 재심 및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학교 스포츠 현장의 인권 보호 시스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자료 출처: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93150>

문경시 A 코치 막말 논란, 스포츠운영위 16일 긴급 소집

문경시청 소프트테니스 실업팀 A 코치가 선수들에게 폭언<본보 2025년 9월 9일자 5면>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문경시는 오는 16일 스포츠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파악과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코치는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3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기간 중, 선수들에게 “X발 새끼들 X 같네” 등의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에 선수들은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으며,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며 연이은 패배까지 겹쳐 팀 분위기는 급격히 무너졌다.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는 “경기보다 코치의 눈치를 더 본다”는 토로가 나왔으며, 팀 이적이나 운동 포기까지 고려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시청 소프트테니스 실업팀을 거쳐간 한 선수는 “A 코치의 막말은 오래전부터 계속 됐으며 체벌도 심했다”며 “이로 인해 팀 이적이나 운동 포기까지 고민하는 선·후배 선수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문경시 스포츠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실업팀 소속 선수들과 개별 면담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6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선수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며 “스포츠운영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지 않고, 실업팀 지도자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선수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자 인사 및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경시는 스포츠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도자 대상 인성교육 정례화, 선수 심리상담 도입, 익명 고충 접수 채널 마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스포츠 소식

괴산 첫 공공 수영장 '괴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내달 1일 개관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814507>

대한체육회, '2025년 우수선수 스마트스타트 프로그램' 본격 운영

<https://www.starnewskorea.com/stview.php?no=2025061616100840638>

체육공단, 하절기 대비 올림픽공원 안전 점검 추진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506160145>

세종시의회, 직원 채용 관련 장애인체육회 감사원 감사청구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6089700063?input=1195m>

국민체육센터 개관 10년 기념...남해군, 작은음악회 연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6_0003214758

영덕에서 열린 제30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성료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50616/131814557/1>

산불 극복의 신호탄... 제21회 영덕해변 전국 마라톤 대회 성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61612330702979>

제77회 충청도민체육대회, 뜨거운 함성 속 막 내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783>

'함께해서 더 빛난'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 종료

<https://www.xportsnews.com/article/201460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